

	<h1>보도자료</h1>	2022. 3. 02 [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문의) 02-784-9862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성과 소개 “원산지 표기·공정거래 확립으로 식탁 위 먹거리 안전 반드시 지킬 것”

- 경기도지사 시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출범 … 전문 직무교육 감시원, 재래시장음식점 등 매년 7만 개소 점검·위반행위 적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에 감시원 400명으로 늘리고 음식점, 유통·판매점 22만 개소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계획 … “국민의 안전에 관한 대응,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일 SNS를 통해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성과를 소개하며 “국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알 권리 확보”로 식탁 위 안전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30번째 시리즈인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경기도지사 시절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출범시킨 것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 ▶먹거리 안전 ▶알 권리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1석 4조의 정책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 직무교육을 받은 원산지표시 감시원들이 나서서 전통 재래시장과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온라인 마켓과 배달앱 등 매년 7만 개소를 점검 및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 이후, 경기도는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리고 도내 음식점과 유통·판매업 22만 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다양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짜 국내산이 맞을까?’ 하는 불신을 견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나아가 경기도지사 시절 원산지표시 제도 강화를 위해 정부에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에 대한 표시 의무 품목 포함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 신설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사업의 경험과 성과로 국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 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먹거리 안전과 공정거래 확립,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사장님, 홍어 원산지가 어디예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흑산도산이에요. 우리는 흑산도 홍어 아니면 돈 안 받아.”

그러나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해당 업체는 2017년부터 4년간 5,500kg 이상 일본산 냉장 홍어를 흑산도 홍어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다양한 농수산물 수입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진짜 국내산이 맞을까?” 하는 불신을 견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명절 전후를 중심으로, 잇을 만하면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으로 식탁 위 먹거리에 대한 안전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먹거리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유통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출범한 이유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알 권리 확보, 나아가 공공일자리 창출까지 1석 4조의 정책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전문강사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을 받은 원산지표시 감시원은 매년 전통 재래시장과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온라인 마켓과 배달앱 등 7만 개소를 점검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원산지표시 홍보·제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에서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결정에 강력 대응하며, 올해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현재 129명에서 400명까지 늘려 도내 음식점과 유통·판매업 22만개소 전체를 매년 1회 이상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 제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는 홍어, 대구, 가자미 등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 중 원산지표시 의무품목에 빠져있는 11종류를 표시의무 품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는 가하면, 일본 원전 오염수 내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에 대한 식품 대상 검사법 신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사업의 경험과 성과로 국내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의 올바른 이행과 정착을 이끌어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식탁 위 안전, 지킬 수 있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30. 경기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이재명은_했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2080959501>